

전통시장 활력 회복 '탄력'

전북 전통시장 30곳, 정부 활성화사업 선정 쾌거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도내 30곳 전통시장이 선정되어 10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는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의 야시장 조성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선정에 이어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최종 지원대상 등을 선정하며 상반기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8개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야시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도내에서 30개 시장이 선정돼 약 10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밝혔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군산명산시장, 완주봉동시장,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 등 3곳, △특성화 첫걸음 사업에 완주삼례시장, △복합형년월 신규조성에 김제시장이 선정됐다.

이들 시장은 앞으로 문화관광형시장 각 10억 원, 특성화첫걸음시장은 3억 원, 청년몰 신규조성은 1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국 22곳 중 3곳, 청년몰 신규조성은 전국 3곳 중 1곳, 야시장 지원사업은 전국 5곳 중 1곳이 도내 시장이 선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안 상설시장 등 4곳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익산남부시장 등 4곳 △전통시장 바우처사업에 전주 서부시장 등 11곳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군산신영설시장 등 3곳 △야시장육성사업에 전주 남부시장 등이 각각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그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고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큰 힘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시장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고객이 즐겨 찾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카자흐 전자정부 고위급 사절단 환영식

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전자정부 고위급 사절단 환영식'에 참석한 윤준근 행정안전부 차관과 아블라이한 오스파노프(Ablaikhan Ospanov) 단장 등 양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전북농기원, 자체 개발 '장미' 해외시장 진출 박차

케냐 현지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자체 개발한 장미 신품종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장미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화훼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개체들을 선발, 해외 시험재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최근 장미 육종 온실에서 프랑스 장미 육종 회사 NIRP International SA 대표와 국내 종묘보급업체 대표 등을 모시고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인공교배 후 선발 육성한 400여 계통에 대하여 국제 시장 선호도, 병해충 발생 정도, 현지 적응성 및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제 시장 경쟁력이 우수한 개체들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개체는 아프리카 케냐 적도 인근 고랭지(해발 2,000m)에서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현지 기후 적응성, 재배적 특성과 시장성 등을 2~3년 동안 평가하여 수출 시장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세계적인 절화 장미 생산 유통은 아

프리카의 케냐와 에티오피아, 중남미의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의 적도 부근 고랭지에서 다국적 꽃 생산·수출 업체에 의해 대단위로 생산되어 아프리카에서는 유럽, 러시아 및 중동에, 중남미에서는 북미와 동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2018년 케냐에 소재한 절화 생산 수출업체인 Black Tulip Group-Kenya와 장미 육종·수출 회사인 NIRP International S.A와 케냐, 에콰도르 현지 시험재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2개소에서 4품종, 30계통에 대하여 실증 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에너지 절약하고 보조금도 지원받고 일석이조!

전북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일반보일러의 1/8수준으로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9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녹스 보일러는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콘덴싱 가스수소보일러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연간 난방비가 100만원인 가정의 경우 연간 약 10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설치비용은 일반 보일러보다 약 20~30만원이 높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도내 저녹스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해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

체하는 경우 1대당 1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19년 3개 시·군(전주, 정읍, 부안)에서 400대(전주 200, 정읍 100, 부안 100)의 물량을 진행하고, 이후 타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의 경우 주택소유자가 원칙이나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또한 포함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 공고는 각 3개 시·군(전주, 정읍, 부안)에서 5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일러 제작사에 저녹스 보일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각 시·군의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내 중소사업장(공장 등),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서 보일러 내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할 경우, 용량에 따라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저녹스 버너 교체를 원할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신청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체 1~2년 전에 각 시·군의 담당부서(환경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김용만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저녹스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며, 저녹스 보일러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에너지절약이라는 두 가지 장점이 있으니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취임... "자치분권 통해 포용국가 실현"

김순은(65)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을 통해 포용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역대정부와 자치분권위가 그간 추진해 온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는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춘천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와 미국 켄트주립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거쳤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내며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과 한국지방

정부학회 회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아 활동해왔다.

문재인 정부 1기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으로 일해왔으며, 정순관 위원장이 사퇴한 후 2개월여 간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했다.

자치분권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로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이어 올 2월에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 신고 지자체서 원스톱 해결... 합동신고센터 시범운영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신고도 관할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세청과 협력해 5월 한 달간 '합동 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합동 신고센터에서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납부하려면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에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

랐다. 행안부는 올해 세무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 46곳에 합동 신고센터를 뒀 한 번에 신고 처리해주게 된다.

내년부터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세무서 신고센터에서 출장·파견 근무하는 형태로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한 곳에서 동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민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산 및 친족관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법 속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총칙편)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1조~제184조에 해당하는 총칙편의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민법 총칙에 수록된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및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법에 맞지 않

는 문장을 고쳐, 총 188개 중 187개 조문을 손봤다. 이에 따라 ▲민법 제104조에 나오는 '공탁(公託)'은 '근거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제65조에 담긴 '해태(解怠)'는 '게을리한'으로 ▲제5조 1항에 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로 ▲제162조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등으로 바뀌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알기 쉬운 민법 개정TF'를 1년 동안 운영했으며, 지난해 2월28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법 총 1192개 조문 중 1106개 조문을 정비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이번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무부는 민법의 나머지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도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 생활의 기본인 민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 법 앞에 역할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